

## 정부 '단체수계' 내년 폐지 추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40여년 간 존속돼온 단체수계의약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연방정부 구매물품의 23%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처럼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체수계의약제도 개편방안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한 단체수계의약제도가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운용과정에서 편중·연고·편법배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단체수계의약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지나친 덤핑입찰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입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도 중심의 국가계약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 기업들 벌과금 규정 복잡·행정편의적

기업들은 각종 벌과금 규정이 복잡하고 행정편의적이어서 과태료나 가산금을 부과하는지도 모른 채 사후에 벌과금 고지서를 통지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서울 소재 200개(대기업·중소기업 각 100곳)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벌과금 관련 기업애로 현황' 조사 결과, 대다수 기업들은 벌과금 관련제도의 복잡성'(49.5%)과 행정편의주의'(44%)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상회는 "대기업의 경우 벌과금 규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은 벌과금 규정을 잘 몰라 몰지 않아도 될 벌과금을 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벌과금 납부와 관련한 애로 사례로는 △상법상 등기의 무 위반 과태료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시 양벌적 과징금 부과 △세법상 납세의무 위반시 2~3년 후 가산금 부과 △차량배출가스 검사 과태료 등이 지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벌과금 제도 중에는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합리적인 법질서 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협 공제기금대출 대상에 당좌수표 포함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조직도 개편키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공제기금 가운데 어음과 가계수표만을 대상으로 대출해오던 어음수표대출(제2호 대출) 대상에 당좌수표도 포함시켜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대출)은 부실방지를 위해 대환 횡수를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 전담인원을 새로 두고 12개 지방지회에 비상근 지회장을 두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 지방중기청 지자체로 이관 추진

중소기업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 조직개편관련 위원회들은 중소기업정책을 맡고 있는 기관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거나 중복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각도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크게 2가지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특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지방중소기업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둘째로는 대통령 직속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기청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다.

이는 중기특위의 정책개발기능과 중기청 중기정책국의 기능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만큼 통합해 각종 중소기업정책을 신속히 마련하자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 금감원 중기대출 은행 감독완화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다소 완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일시적인 자금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은행 감독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탄력적 감독정책이란 호황국면에서 건전성 고삐를 죄는 대신 침체국면에선 건전성 고삐를 당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경기상황에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경험손실률을 적용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더 쌓도록 유도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유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 중기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원장 백낙기)은 중소기업 대상의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보안의식 고취와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전진단 사업과 사후 복구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사전진단 사업은 기업의 전산시스템을 물리적·관리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긴급조치나 대처법,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 주는 것. 원하는 업체에 한해 참여 컨설팅 회사의 정보보호 솔루션을 할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내년부터는 정보보호 솔루션 구축까지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채권은행협 中企 공동워크아웃 본격 추진

금융권 채무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채권은행의 75%(채권액기준)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동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등 19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는 최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협약에 따르면 공동관리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 여신비중이 75% 이상일 경우 주채권은행이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공동관리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공동관리 절차가 추진된다.

주채권은행의 여신비중이 75% 미만이면 ▲공동관리 대상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채권액의 4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채권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기타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채권은행 75% 이상의 동의로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된다.

## 中企 산업공동화 우려 고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가속화로 산업 공동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의 해외 투자를 추월하는 등 너무 과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속도 조

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4월 말까지 620건, 6억8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531건, 3억9천만 달러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55.9%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이뤄진 대기업의 해외 투자 6억6200만 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며 개인 사업자의 1억2300만 달러까지 포함하면 대기업의 해외 투자를 웃돌았다.

## 중소제조업 경기침체 지속

내수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급등과 중국경제 긴축 등 대외 악재마저 겹쳐 6월 이후에도 중소기업 체감경기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체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중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SBHI)는 전월(92.3)보다 하락한 84.3을 기록,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SBHI는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음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업황전망 SBHI를 업종별로 보면 기타운송장비(103.7),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103.2) 등 2개 업종을 제외한 18개 업종의 지수가 100미만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93.7)에 비해 50인 미만 소기업(80.0)의 지수가 훨씬 낮았으며 부문별로는 중화학공업(91.7)에 비해 경공업(76.5)이 낮았다. 항목별로는 생산(87.2), 내수(83.1), 수출(90.1), 경상이익(78.4), 자금조달사정(79.3) 등 대부분 항목이 100을 밑돌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295만 中企 한목소리 낸다

전통제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소상공인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4개 중소기업단체들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김용구 중기중앙회장, 장홍순 벤처기업협회장 등 13개 단체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최근 우리경제가 원자재난과 고유가, 경기침체, 제조업공동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급격히 잠식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中企단체협의회는 경제살리기 합의문을 채택했다.